

국내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김일중[†]

GS건설 주식회사

The Strengthening Plan of Competitiveness in Domestic Water Industry

IL CHOONG KIM[†]

GS Engineering & Constuction

1. 서론

물산업이란 무엇인가? 환경부에서는 '용수(생활, 공업) 공급 산업과 하수 및 폐수의 이송, 처리 산업 서비스'라 정의하고 있다.

물산업 단어 이전에 우선 산업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인간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생산적 기업이나 조직'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행정서비스를 비즈니스화하고, 관리가 경영으로, 관리자는 사업가로 지역독점은 경쟁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국내 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위주에서 민간기업 위주로, 관리시스템을 경영시스템으로, 국내 독점에서 외부 개방으로, 기존기술적용에서 미래기술 적용으로, 토목공사 위주에서 시스템 산업으로, 국내시장위주에서 세계 시장 진출로 방향이 바뀌어야 산업으로의 변화가 가능하다.

국내 물산업은 2003년 기준 10.9조원이며, 상하수도 분야가 이중 8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미 국내 상하수도 보급비율이 80~90%를 넘어서고 있어 인프라 확충보다는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개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10년내 20조원 규모의 산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수준의 스타기업 2개 이상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 개편,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 핵심기술 고도화, 우수인력 양성,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를 중점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육성방안이 발표된 것으로만도 커다란 관문을 넘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 어려운 과제가 수없이 많이 존재하며, 많은 변화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국내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 추진

우리나라 상하수도산업의 문제점은 상하수도사업이 지자체 직영의 행정사무로 수행되며, 수평적 수직적 사업 단위의 분절로 사업자가 너무 많다는 구조적인 원인에서 발생하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편이 시급히 필요하다.

상하수도사업 구조개편의 방향은 세계적인 시장개방과 표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존 공공부문에서 경쟁력있는 전문 물기업을 육성하고, 이들 기업간에 경쟁을 유도하여 취약한 시군 단위의 중소규모 상하수도사업을 통합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

국내의 물전문 선도기업이 가능한 기관은 대략적으로 수자원공사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 등 특.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정도라고 볼 수 있다. 구조개편의 기본 원칙은 무엇보다도 현재 사업수행 주체인 167개 지방 자치단체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기본해야 한다. 상하수도사업은 지방정부 소유로서 자율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율적 구조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상하수도사업은 지방정부의 행정사무로 취급되어 매우 비경쟁적인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지자체의 변화 동인이 부족하므로 사업자가 변화하고 시장기능이 작동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르는 법과 제도의 정비 등 추진 방안이 요구된다.

환경부에서 2006년도에 추진하는 공공부문의 구조개편 및 민간참여 활성화 로드맵 작성 계획은 많은 기대를 하게 한다. 단계적으로 민관공동체제를 거치고 민간주도체제로 전환하는 기본 구상이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주도를 기본적인 골격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중앙정부는 자율적인 구조개편의 법적,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규칙 설정자, 부실 상하수도사업자의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심판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를 변화시키고, 주도사업자를 육성하여 수도시장을 형성하고 우리나라 수도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도

[†]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ickim@gsconst.co.kr

순위	기업명	매출액 (백만)	서비스인구 (만명)	해외사업비중	비고
1	수에즈(프)	6,986유로	12,002	86%	민간 전문기업
2	베올리아(프)	9,805유로	11,753	79%	민간 전문기업
3	알베에(독)	4,065유로	7,527	61%	민간 전문기업
4	아그바(스)	968유로	3,490	54%	민간 전문기업
5	사베습(브)	1,656달러	2,560	0%	광역공사
6	유나이티드 유틸리티(영)	1,126파운드	2,383	57%	민영화 물기업
7	FCC(스)	514유로	1,740	45%	민간 전문기업
8	아체아(이)	366유로	1,545	44%	도시 직영 사업자
9	서번 트렌트(영)	1,126파운드	1,448	43%	민영화 물기업
10	소어(프)	1,531유로	1,371	56%	민간 전문기업

* Global Water Intelligence 2005년 11월호

법,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너무 틀에 박힌 탁상공론으로 끝나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다. 아래 표와 같이 세계 10대 물기업의 형태를 보면 대부분 민간 전문기업임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을 살펴보면, 민간주도로 적극적인 해외기술 도입을 통하여 세계기업으로의 약진을 한 사례를 염두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수도산업의 개편방안에 대한 정부부처간의 정책을 보면 아래와 같이 정부부처별로 제각각임을 알 수 있다.

2.1. 행정자치부

근본적으로 공사화 방안이다. 지자체의 간접 경영방식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의미하고 있다. 2002년 상수도사업을 전국 30개 생활권역별로 공사화하는 수도권업 구조개편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2004년 8월 지방상수도 효율적 공사화 추진전략 연구 용역을 완료한 상태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특 광역시의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사화와 인구 50만이상 규모 시 중에서 일부 단체의 공사화가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지자체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광역화 및 수자원공사 등에 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상수도사업의 위탁업무 처리요령(2004.9)과 위탁경영확대지침(2005.5)을 시행하여 지자체의 자율적 개편을 촉진하고 있다.

2.2. 환경부

2001년 2월 상수도 민영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상수도 사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영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거친 장기적인 완전 민영화 추진은 지자체의 강한 거부감으로 유보되고 있다. 이 정책에 따라 수도법에 전문기관에 의한 수도시설 위탁운영과 수도사업에 민간자본 유치 조항이 삽입됐고, 2004년 12월 ‘전국수도종합계획’ 연구용역을 통하여 시장에서의 필요와 사업자간의 경쟁에 의한 자율적인 수도권업 구조개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수공과 7개 특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주도기업으로 육성하여 150개 이상 시,군지역에서 경쟁토록 함으로서 효율화를 유도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도법 하위법령과 지침에서 수도시설 위탁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2.3.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하여 행정개혁, 인사개혁, 지방분권, 전자정부, 재정세계 개혁 등의 5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다. 재정세계개혁의 15개 추진 과제 중 9번째 과제를 ‘재정지출 구조개혁’으로 선정하고, 세부 추진 과제로 ‘지방 상수도 경영합리화’를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지방 상수도 경영합리화는 행정자치부 주관 환경부, 건설교통부 협조로 2006년 추진전력을 수립하여 시범실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상수도 사업의 광역화 방안을, 행정자치부는 공사화 방안을 검토 지원하고 있다.

2.4. 지속가능발전위원회 (PCSD)

2003년 12월 대통령 자문을 주요 기능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출범했다. PCSD주관, 건설교통부, 환경부의 협조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구축’의 한 분야로 상수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005년 10월 개최된 ‘제67회 국정과제 회의’에서 상수도 관리체계 개편은 국무총리의 조정 결과에 따르도록 재확인되었다. 물관리체계의 개편을 위해서는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 신설 방안이 채택되어, 국무총리실에서 ‘물관리기본법’ 제정등이 준비중에 있다.

금번 물산업육성방안에 따라 환경부 주도하에 각 부처간의 원활한 협의를 통한 일관된 정책추진이 수립되길 바라는 바이며, 민간에게 더욱 많은 개방과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민간은 필요한 것은 과감히 받아들이며, 비합리적인 사항은 제거하면서,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에 매진할 것이다. 개방하는 만큼 산업은 육성될 것이다.

3.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정부는 상하수도 기반시설 구축 및 개선사업 지속적 확대를 하고자, 하수관거 정비사업(12.8조원), 댐상류지역 하수도 설치 지원사업 (1.1조원), 비점오염원관리사업 (5,600억원), 하수슬러지 감량화 자원화사업 (5,121억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 육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하지만, 현재 사업 추진 중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의 예산을 보면, 실망할 사항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시범사업인 한강수계 하수관거만 보더라도 최초 사업비에서 무리한 감축과 현실적인 현장 여건을 고려치 않음으로 인하여 참여 기업의 막대한 손해를 유발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품질 저하가 염려되는 현실이며, 건교부 주관의 토목공사와 달리 대기업 참여에 따른 간접비를 고려치 않는 직접경비 위주의 사업비 책정이 진행되고 있음은 환경부의 산업 육성 방안과는 거리가 먼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산업은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보편적 재화이며, 기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이고,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효과가 작동된다. 기존의 정부 주도의 산업육성을 벗어나 민간과 지자체간의 자율적 사업비 책정과 서비스 향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재원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국고 지원과 더불어 부족 재원의 민간 투자를 과감하게 활성화시키는 유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수도요금의 경우 강원도 영월이 1058원/m³에 비해 경기도 과천시 277원/m³, 생산원가도 강원도 평창이 2423원/m³이나 경북 구미시는 379원/m³으로 나타났다. 특 광역시나 일부 규모가 큰 시의 경우 인근 지자체나 광역상수도과 중복 또는 과잉투자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 시설의 이용율은 점차 낮아져, 2004년 기준, 지방 상수도 69.9%, 광역상수도는 47%까지 이용율이 떨어진 상황이다. 수도물 원수비용 결정시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낮은 유수율로 인한 수도물 낭비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유수율이 78.4%로 나타나 신뢰성 부여가 곤란하다.

결국 지자체의 재원부족으로 노후관 개량 사업시행이 곤란하며, 일부 전문기관의 투자나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물산업은 연간 10조 원 규모의 거대산업이지만, 경쟁력이 떨어져 세계 물시장 개방과 표준화에 취약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미 국내 총생산(GDP)의 1.3%까지 성장한 물산업의 효율화는 국가 경쟁력 유지와 강화에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민간사업자의 상하수도 분야 진출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추진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복합도시, 신도시의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의 민자유치 적극추진은 현재도 일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민자사업은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임을 염두에 두어야 함에도 일반 공공발주 사업과 혼돈하여, 민자사업을 추진하

는 업체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재현되고 있어 물관련 사업 민자사업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더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라는 바이다.

상하수도 사업의 중요한 사항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법적 규제치의 준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예산의 투입하는 것이 당연하다. 민간기업은 최소한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기반이며, 상하수도 사업예산의 일방적인 감액은 감액하는 만큼 비례하여 서비스 품질저하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4. 핵심기술 고도화 및 우수인력 양성

정부는 수처리 선진화 사업을 통하여 신규시장 창출과 기술개발을 유도하고자, 고도처리 국산화로 국제 경쟁력 향상을 추구하며, 고효율, 집적형, 하폐수처리 및 정수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 경제, 산업경제 측면에서 큰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과거 G-7 연구사업과 같이 많은 연구비와 연구인력을 투입하였지만, 실용화에 실패했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기우일까?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른 실용화에 성공하길 바라는 바이다.

좋은 기술은 있으나, 실용화되지 못하는 것은 기술과 시설투입에 따른 이익이 적은 경우일 것이다. 하수 재이용을 하고자 하나, 비합리적인 수돗물 가격이 유지된다면 시설투자를 할 수 없을 것이며, 고도처리를 하고자 하나, 시설투자에 따른 비용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고도처리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보다 높은 규제와 환경 보전을 위해 합리적인 비용 산정이 적용되는 것이 우선된다.

그리고, 국내 기술이 해외 기술에 비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발표하는 경향이 많으나, 국내 시장이 활성화만 된다면, 기술개발은 따라서 발전할 것이므로, 정부주도의 기술개발과, 민간기업의 자체 기술 개발을 활용하기 위해, 더욱 고도화된 상하수도 인프라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기존 토목 위주의 시설투자보다는 미래적이고 통합적 시스템을 추구하는 인프라 구축 방안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물산업의 수출역량 강화

국내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어 감에 따라 국내의 제한된 시장에서의 출혈성 경쟁보다는 새로운 해외시장 진출이 필요하다.

정부는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KOTRA 등을 통한 해외 물산업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며, 수출보험 및 시장개척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정개발원조(ODA)시 물산업분야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현재도 일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원조 규모에서 볼 때 국가위상 제고와 국익증진을 위해 우리의 경제력이 상응하는 수준을 지원을 확대해

야 할 것이다. 현재 지원되는 EDCF의 경우 3천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건당 지원규모의 상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대외원조 규모가 확대되고 분야가 전문화, 다양화되고 있어 부족한 관련 전문가 양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수출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물산업기자재 전시회의 국제적 박람회 육성과 해외 사절단 파견,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발주처 인사 초청 사업 등을 이용하고자 한다.

지원 시 분야별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분야를 선정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에 집중하여 원조성과 및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가 전략 차원의 원조모형을 개발해서 알려야 할 것이다.

국제 네트워크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도국 물산업 관계자 교육과정을 확대(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하고, 국내 전문인력 해외파견 및 교류를 확대 추진한다.

따라서 원조사업을 추진하는 프로젝트와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원조대상국에 대한 정보를 종합한 DB를 구축하여 민간기업과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 발굴단계 부터 수원국 의견 수렴 및 진행과정에서의 공관의 협조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6. 결론 : 국내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대기기업의 역할

1)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에 적극 참여

정부가 추진하는 상하수도 부문 기업형식 운영체제의 구조개편 추진에 대하여 공사 및 지자체 운영기관과 연합하여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과감한 기업투자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대기기업은 사업에 대한 기획, 설계, 시공, 시운전 등의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과감한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제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는 해외사업 경력을 가지고 있다. 민간의 합리적인 경영활동으로 목표한 민영화 목표에 손쉽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산업 육성 방향에 맞추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강력한 홍보를 시행하여, 국민적 공감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대기기업의 지사 및 현장을 통하여 낙후되어 있는 상하수도 시설의 개량이 필요한 지자체에 적극적인 민자유치 및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로서 인프라 개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의 상하수도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긴밀한 의견 교환으로 합리적 사업비 산출을 하고, 향상된 서비스를 실

현하며, 신규시장 창출에 적극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투자를 하거나, 신기술을 적용한다.

정부주도의 사업추진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할 것이지만, 민간특유의 기획형 사업 추진을 통한 시장 창출을 확대할 것이다.

3) 핵심기술 고도화 및 우수인력 양성

현재 정부주도의 연구사업과 대기기업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핵심기술 개발에 더욱 과감한 참여 및 투자로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 전파할 것이다.

민자유치와 민간위탁에 따른 시설 운영시, 선진화된 운영체제 및 기술을 개발하고, 우수한 운영자 양성 및 우수사례를 신속히 전파하고자 한다.

우수한 기술의 전파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기술력을 배양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해외 현지 맞춤형 기술개발사업을 관련국과 공동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국내의 세계적인 IT, BT 미래기술을 ET에 적극적 적용을 하여, 세계적인 ET기술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4) 물산업의 수출역량 강화

국내 적용 선진기술을 개도국에 적용하기 위한 해외진출을 추진하며, 정부의 해외지원육성책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성을 보완하고 향후 시장 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세계 10대 물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기획, 설계, 시공, 운영의 선진화를 추구하여 국가적인 협력체제에 기여할 것이다.

5) 건의사항

금번 환경부의 물산업 육성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기존 기득권과 사고를 과감히 버리고, 서로가 협력하는 관계가 될 때에 가능할 것이다.

각종 규제를 풀어서 민간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선진국의 기술에 의해 국내 물산업 시장이 잠식될 것을 걱정하는 바가 있다. 하지만 과거 쇠국정책에 따라 우리나라는 뼈아픈 과거를 가졌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은 세계화시대임을 인식해야 하며, 우리의 부족한 기술과 현실만을 가지고 합리적인 선진기술과 민영화에 거부하는 자세는 현재는 좋아 보일지 모르나, 가까운 미래에는 국제 경쟁력에 뒤쳐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민간기업은 세계적인 물기업에게서 필요한 기술은 받아들이고, 국내 현실에 맞도록 더욱 발전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필요하다면, 세계적인 기술 개발도 과감히 시행할 것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각 분야에서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은 과감히 인정하여 강점을 가진 상대를 받아들이는 자세만이 정책의 성공을 가져오리라 생각한다.